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라

박근혜
퇴진 운동

2, 3, 4면

사드, 한일군사협정,
미국의 동아시아
제패 전략

5면

두 달 넘게
파업하는
철도 노동자들

8면

노동계급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려는
대학 구조조정

8면

피델 카스트로(1926~2016)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투사이자
억압적 지배자

6면

‘민주주의’라 해서
다 같은 것인가?

7면

국제
오스트리아 대선,
이탈리아 국민투표

6면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비리 재벌 총수 구속하라

김어진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몸통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 재단과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2백여억 원을 준 답례로,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4.1퍼센트(약 8조 원)의 통제권을 거머쥐었으니 그야말로 최대 수혜자다. 2017년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과 영유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한 보건복지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노동자들의 노후 자금(국민연금) 6천억 원을 퍼부었다.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 정책도 차병원 그룹과 삼성의 헬스케어 산업을 전폭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뇌물 1백28억 원을 준 현대는? 1백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 중 일부를 서울 삼성동 땅 투기에 써서 기업 소득 환류세(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 8천억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를 사실상 면제받았다. 롯데와 SK는? '유통업의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면세점 입찰 참여뿐 아니라 검찰 내 사무마와 사면 약속을 얻으려 했다.

정의당 부설 연구소에 따르면, 재벌들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8백억 원으로 얻은 특혜는 약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삼성반도체 공장 산재 피해자에게는 "1백만 원짜리 수표 5장으로 해결"하려 하고(고 황유미 씨 아버지), "노조도 못하게 하더니 권력 앞에 돈 갖다 바친 재벌들"도(건설노조 현수막) 부패의 몸통이다.

재벌의 추악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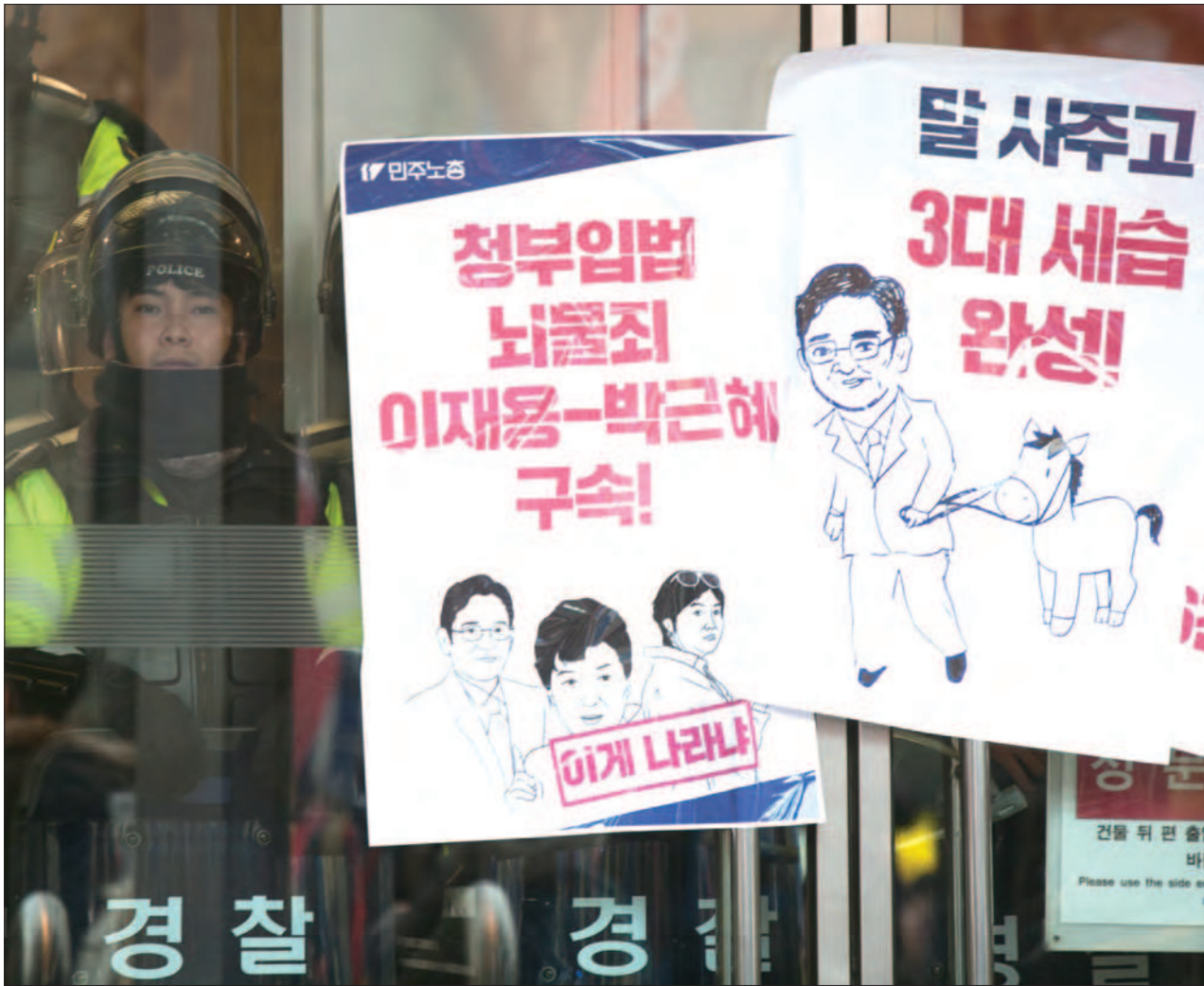
재벌의 역사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뇌물로 사용해 막대한 특혜를 누린 비리와 범죄의 역사다. 현대, 삼성, SK(옛 선경), 한화 등은 1950년대에 창립했는데, 그 초기 자본금을 '공유 재산 사유화'로 얻었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농지, 주택, 기업을 헐값에 사들이고, 미국 원조 물자를 약간 가공해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삼성 이병철은 이승만에게 정치자금 4억 2천5백만 원을 주고 제일제당과 제일모직 같은 옛 일본 기업을 헐값에 받아 챙겼다.

군사정권은 세금 감면, 금융 특혜, 노조 활동 제한법 등으로 재벌의 뒤를

보냈다. 그 결과 현대, 삼성, LG(옛 럭키금성), 선경 등 많은 기업들이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 등에 진출해서 독과점 지위를 누렸다.

재벌들은 국가 산업을 불하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예를 들어 SK는 1980년대에는 국영 정유회사인 대한석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를 매입했고, 1990년대에는 노태우의 사돈 기업이 돼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했다.

뇌물과 특혜 봐주기는 항상 있는 일이었다. 현대 정주영은 국가 고위 관료들에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상납했고, 삼성 이병철 등은 전두환 판미르재단인 일해재단과 노태우 비자금 조성에 출연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



박근혜·최순실의 공범, 삼성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삼성 본관에서 이재용 구속을 요구했다.

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의 아들들과 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박지원도 뇌물을 받아 수감 생활을 했고, 노무현 대선 캠프도 '차떼기'로 1백 13억 원을 받았다.

그동안 재벌들은 뇌물을 쓰며 막대한 득을 보면서 손실은 사회로 떠넘겼다. 재벌 총수들도 박근혜와 함께 구속돼야 할 이유다.

구조조정 액션 플랜은 대량해고 계획

11월 25일 정부는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공개했다. 이번 액션 플랜은 앞서 지난 9, 10월 발표한 경쟁력 강화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이 힘을 잃을 듯하자 구조조정의 전열을 가다듬으려 나선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구조조정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은 세계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한국 경제도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 경기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자 국내외 시장금리는 급등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한국의 가계부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올 3분기 말 전체 가계부채는 1천3백조 원까지 치솟았는데, 대출금리가 1퍼센트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11조 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도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자

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줄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고,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해 기업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금리가 오른다면 정부가 시중금리를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만 불안정한 것도 아니다. 지난 10월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퍼센트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10월 경상수지 흑자는 87억 2천만 달러로 5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라서 실제로는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등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액션 플랜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액션 플랜에도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직영 인력을 6만 2천 명에서 4만 2천 명

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부서의 22퍼센트를 감축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발표한 데 이어,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맡고 있는 ICT 부문(1백50여 명)도 분사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해고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은 이미 '희망퇴직'으로 1천2백 명을 해고했는데 말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사업부문을 제외한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부문을 분사하기로 했는데, 이 분사화는 비용 절감을 노린 것일 뿐 아니라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려는 목적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면 정몽준 일가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안정적인 3대 세습을 위해 노동자 수천 명의 처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지키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 시위에 참가하는 한편, 파업 등으로 기업주들의 공격에도 맞서야만 경제 위기 시기에 임금과 고용을 지킬 수 있다.

강동훈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트럼프가 당선한 직후 박근혜는 전화를 걸어 "가까운 장래에 뵙고, 더욱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선인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회동 의사를 적극 내비쳤다.

당시는 거리에서 1백만 명이 퇴진을 요구하고, 지지율이 5퍼센트로 급추락한 때였다. 즉각 퇴진 요구는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과시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해 보려는 셈법이다. 지난 4년 동안 "해외 순방"을 정치적 위기 탈출용으로 곧잘 이용하던 낯익은 수법이다.

한국 지배자들은 중요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전두환은 1981년 1월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미국을 방문했다. 1980년 광주학살이 벌어진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기에, 이 방문은 미국이 전두환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박정희도 3선 개헌안 통과 시도 직전 미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의 위기가 워낙 깊고, 트럼프로서는 박근혜를 서둘러 만날 이유가 크지 않은 탓에 박근혜의 탈출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불순한 목적과 내용

박근혜가 트럼프와 만나려는 의도도 불순하지만 둘이 만나 나눌 대화 내용이라는 것도 노동자와 전대받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

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불안정을 키울 계획과 정책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할 것이 뻔하다. 최근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이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시장화를 강화하는 한미FTA 재협상도 의제에 올 수 있다.

지난 4년간 박근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적극 지지해왔다.

최근 박근혜가 사드 부지 협상을 타결해 미국의 MD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최근 아베와 트럼프가 만난 것을 보면 박근혜의 노림수를 내다볼 수 있다. 아베는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는 데서 핵심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릴 목적으로 트럼프를 서둘러 만났다. TPP는 미국과 일본 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민영화 확대 등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트럼프가 아베와 회동하고 나서 내년 1월에 TPP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해 아베의 노력은 허사가 됐다.

박근혜는 끝수 부리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김지윤

여당은 물론이지만 주류 야당의 정치인들도 아래로 부터의 대중 행동을 마음 속 깊이 경멸한다. 의미 있고 진정한 정치는 국회의 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마치 거리의 정치는 유치하고 하찮은 양, 심지어 말썽꾼들의 사기성 소동이나 되는 양하는 말투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주류 야당은 자신의 배신에 대한 노동계급의 비판을 모면하고 지지자들의 좌경화를 막으려고 덕망과 존경 받기의 중요성을 주문처럼 되뇌어 왔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의당의 심상정·노회찬 의원조차 지난해 까지만 해도 자신들은 기층 투쟁보다는 점잖은 제도권 정치를 지향한다고 공언했다.

주류 야당 정치인들은 항의 집회와 시위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는데도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곤혹스럽다. 동시에, 그들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도 두렵다. 완전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 모순을 피할 수 있고 안심되는 모습이라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일각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 퇴진 촉구 집회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자거나 주류 야당들에 탄핵을 촉구하자는 안(案)이다.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트로츠키가 “의회 크레틴병”이라고 부른, 일종의 운동발달장애인 의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맥락에서 대중 직접행동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첫째, 박근혜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듯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건 박근혜를 직접 공격한 대중 항의 운동이었다. 항의 집회와 시위는 그동안 큰 효과가 있었다. 첫 집회가 열리던 10월 말에 건취 박근혜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을 하다가 이제 4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청년 속에서 0퍼센트다!

둘째, 아래로부터이긴 하지만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간접적 행동은 이보다 비효과적인 데다, 지금 이 순간 대중적 직접행동이 활성화돼 있는 점에 비춰 보면 불필요하다.

셋째, 탄핵 프로세스가 우여곡절로 점철돼 있음을 고려한다면(별써부터 ‘아권 공조’가 벼껴거린다), 의회가 박근혜 퇴임의 행위 주체가 되는 것은 전망이 훨씬 불확실하므로 위험하다.

우리 정치사 속 항의 행동들

우리 나라 최근 정치사에서 항의 행동이 효과를 거둔 사례는 아주 많다. 1987년 6월항쟁은 전두환·노태우로부터 6·29라는 양보를 얻어 냈다. 6·29양보안은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출판의 제한적 자유 등 일단의 제한적 민주적 기본권들로 이뤄져 있었다.(제한적이라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제약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1991년 5월의 ‘분신정국’은 노태우 치하의 최대 항의 시위였다. 그 시위로 당시 총리 노재봉을 앞세워 정치적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던 군부의 시도가 좌절됐다.

1995년 12월의 한총련 시위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광주 민주화 항쟁을 유혈 진압한 혐의로 구속시켰다.

1996년 말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에 항의해 이듬해 초까지 일어난 항의



민중의 힘에 의지하라

운동은 민주노총 총파업과 결합돼 개악의 수위를 다소 낮추거나 개악의 발효를 늦추는 효과를 냈다. 그리고 그해 말 대선에서 일당 국가가 와해되는 데 결정적으로 일조했다.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촛불 시위는 이회창을 대선 후보로 앞세운 옛 여당의 정권 되찾기 시도를 좌절시켰다.

2004년 노무현 탄핵을 반대한 촛불 운동도 구여권의 탄핵 시도 좌절시키는 데, 뒤이어 총선에서 구여권을 대패(大敗)케 하고 민주노동당이 대약진하는 것을 도왔다.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촉구 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거대한 촛불 시위는 비록 패배했음에도 이명박의 파죽지세 공세를 한동안 주춤케 만들 수 있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하게 하는 데 크게 일조했고, 민주노동당이 소생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국제적이고 역사적인 수많은 사례는 일단 제쳐 놓고 논의를 이어 가자.

이 모든 경우에 민주당은 어부지리를 얻는 데에나 몰두했다. 그리고 어부지리로 심지어 그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동안에는 전에 군부-재벌 정당이 감히 못 했던 공격을 자기 지지자들에게 하는 따위의 일이나 했다. 물론 듣기 좋은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말이다. 김대중-노무현 하에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난 것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외교적·군사적으로 도왔고, 민주적 권리의 상징인 보안법 폐지는 전혀 한 걸음도 못 내렸고, 심지어 과거사 청산도 제대로 하지도 못 했다. 그들은 민중(노동자와 대다수 여성 등 천대받는 대중을 아우르는 말)과 함께 소리치는 걸로 시작하지만 거의 언제나 민중을 배신하는 걸로 끝났다. 말하자면, “1백만

원 삭감 안 돼!” 해 놓고 80만 원 삭감에 동의하는 식이었다.

노동계급의 운동과 조직이 성장한 1980년대 이래로,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개혁주의 정당 민주당은 계급투쟁이 두려워 언제나 운동이 민중주의(반동적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 계급을 초월해서 단결해 그 극소수를 권좌에서 축출하자는 사상) 기조를 유지하고 제도권과 의회 안으로 수렴되도록 애썼다. 2008년 촛불 운동이 1백만 명을 결집시킨 6월 10일 직후 그들을 대변한 이데올로그 최장집과 김우창은 의회로 공을 넘기라고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을 통해 주장했다. 그 결과는 어물어물하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차 막지 못하고 운동이 패배하는 것이었다.

민중의 힘과 항의가 의회 책략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사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그 경영자들은 이윤 생산에 의존하는데, 이들은 정치인들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책략보다는 민중의 힘과 항의에 의해 훨씬 위협받는다. 특히, 정치인들은 길들일 수 있고, 감언이설로 설득할 수 있고, 뇌물 먹일 수 있고,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반면 민중의 힘과 항의는 정부 행정과 경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민중 가운데 노동자가 하던 일을 멈추면 사용자들인 기업인들이 보는 손실은 크다. 일터를 접거라도 하면 더욱 말할 나위 없다. 현대차와 기아차 소유주들과 정부가 해당 노조 지도자를 압박하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두 달 전 현대차 파업은 정부로부터 심지어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을 받았다.

계급투쟁

민중 항의의 둘째 효과는 항의 집회 참가자의 의식에 좋은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거대한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경험한 참가자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지인들(친구, 가족, 직장 동료, 학교 동료 등)에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을 촉발한다. 이게 여론 형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민중 항의의 셋째 효과는 실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민중의 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 지배자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세계 유수의 자본가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11월 29일치는 박근혜가 즉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실직고하든지 아니면 즉시 물러나든지 해야 한국 정치가 안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던 것이다.(글쎄, 검찰에 이실직고한다고 민중의 힘이 사그라들지 의심스럽다.)

또, 국제 자본가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12월 3일자도 박근혜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민중 거리 항의가 특히 노동자 대파업 투쟁과 결합돼 지배자들의 제어를 벗어나게 되면, 혁명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물론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특히 노동계급의 투쟁 수위와 의식이 민중주의를 넘어 일반적인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민중의 힘이 지속되면 참가자들, 특히 노동자와 학생의 의식이 변할 것이다. 평소에 책과 신문, 강좌 등이 변모시키는 것보다 몇 갑절 빠르게 사람을 변모시킬 수 있다. 투쟁을 통해 집단적인 힘과 자신감 고양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사람들한테서 통제력을 박탈해 민중이, 특히 노동계급이 자신감 결여와 무력감을 느끼던 것이야말로 계급의식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민중의 힘이야말로 박근혜 퇴진과 퇴진 ‘이후’를 이어 줄 고리인 것이고, 노동자의 힘은 특히 ‘잃어버린 고리’인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선택]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5만 원 | ☐ 5만 원 이상 ()원

☐ 기타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010-6491-2792 / ws@wspaper.org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김영익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시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두 사안에서 확실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한국 측에 요구한 것이다. 둘 다 동북아에서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선결 과제다.

결국 11월 16일 한국 국방부는 롯데와의 사드 배치 부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사드 배치를 위해 한발 더 내디디며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어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자, 미국은 이 협정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도 강화해 줄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서울에서만 1백50만 명이 퇴진 시위에 참가한 후에도, 29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박근혜 진퇴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이처럼, 박근혜의 처지가 불안정함에도, 한·미 양국은 한일군사협정을 마무리했고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한·미 동맹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진 출처 미국 공화당

사드 배치 밀어붙이는 미국 트럼프는 동맹의 비용 부담과 역할 증대를 강하게 요구한다.

러나 그에 따른 위험은 한반도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다 떠안게 됐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 재검토?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사드 한국 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는 한때 ‘MD는 실질적으로 쓸모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물론 현 시점에서, 차기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동아시아·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레이건의 슬로건인 “힘

을 통한 평화”를 표방했고, 군사력 증강과 일방주의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 또한 내비쳐 왔음을 주목해야 한다. 9월 초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그는 공화당의 핵심 정책을 수용해 “유럽·아시아·중동에서 MD 핵심 수단들을 재건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가 그대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어쩌면 더 나아갈지도 모른다. “트럼프 정부는 [사드 외에] 북한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첨단시스템을 추가로 모색할 것이다.”(미국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프로그램 소장 패트릭 크로넨)

트럼프는 그 대가로 비용 부담을 전보다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사드 배치와 운용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심지어 “한국이 [사드를] 사서 배치하고 할 수도 있고, 최소한 ‘1+1’, 즉 하나는 미국이 배치하고 하나는 한국이 구매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

트럼프가 동맹의 역할 증대와 비용 부담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대중국 선봉장이라는 일본의 구실이 더 부각될 수 있다. 그에 따라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라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도 더 거세져 한·일 군사동맹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청와대서 버티며 친미·친일 정책 고수하는 박근혜

박근혜는 즉각 퇴진 요구를 무시하며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다. 동시에 한일군사협정 체결 강행 등 온갖 친제국주의 정책을 매우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11월 16일 박근혜 정부는 사드 부지로 선정된 롯데골프장을 대체 부지와 맞교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롯데와 합의한 것은, 롯데골프장을 매입하면 국회 예산심의를 피할 수 없어서다.

지난 9월 중국 해군이 사드 배치를 겨냥해 서해에서 대규모 실탄 훈련을 전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12월 2일 박근혜 정부는 독자 대북 제재도 발표했다. 5·24 제재 조치도 유지하고 개성공단마저 폐쇄해 남북 교류는 완전 차단되다시피 해, 더할 게 남아 있나 싶지만 말이다. 이 또한 미국·일본의 독자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다.

복지 희생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일은, 지난 22일 방위사업청장 장명진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다.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려면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편익을 봐주며 협력해 왔다. 퇴진 운동이 분출한 기간에도 그는 악행을 거듭했다.

제국주의 간 갈등으로 우리 삶은 더 위험해지고, 남북관계는 더 악화하며, 우리의 복지도 희생될 것이다. 이런 악행을 단 하루도 참을 수 없다는 게 지금 운동의 목소리다. 박근혜는 그의 온갖 악행들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미국이 새 유엔 대북제재 밀어붙이다

지난 북한 5차 핵실험에 관한 제재 결의안이 11월 30일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다. 지난 9월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새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는 제재 수위가 전보다 더 높아졌다.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를 확대해,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제 기존 석탄 수출 물량과 액수에서 대략 38퍼센트만 수출할 수 있다. 금융 제재도 강화됐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자격’을 문제 삼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만간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무역 대금을 결제하고 돈을 이체하는 금융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북한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유럽연합(EU) 등과 협의하고 있다.”(중앙일보))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해서 그 효과가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대북 강경노선은 유지될 것이다.

보장되는 건 아니다.

미국은 강력한 제재로 이란을 핵 협상에 나서게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원유 수출과 소비재 무역으로 세계경제와 긴밀히 관계를 맺어 온 이란과 달리, 북한은 오랫동안 고립된 채 교역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왔다.

중국은 제재 강화로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게 자국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한다. 그래서 석탄 수출 제한 조치에도 중국과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

이 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결국 대북제재 강화는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북한의 반발과 군사적 대응만을 초래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 ‘위협’ 이용

그동안 미국은 북한 핵과 로켓 실험, 남북 긴장 등이 벌어지면 북한 ‘위협’을 부풀려 동아시아에서 동맹과 군사력 강화 같은 전략적 이익을 추구했

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 ‘위협’을 이용할 때마다 그만큼 한반도의 불안정도 증대해 왔다.

차기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악재가 될 것이다. 적잖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외교노선을 고립주의라고 착각하는데, 트럼프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면 해군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필요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도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을 근본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임명한 일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다. 예컨대,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플린은 북한을 두고 (2002년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유사하게)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세속적 동맹”이라고 비난하며 대북 강경책을 주장해 온 자다.

피델 카스트로(1926~2016)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투사이자 억압적 국가의 지배자

데이브 수얼

피델 카스트로는 한편으로는 미국 제국주의에 결연히 맞서 미국의 콧대를 꺾은 자유 투사로,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의 지배자로 기억될 것이다.

1926년에 태어난 카스트로의 성장기에 쿠바는 사실상 식민지와 다를 바 없었다. 쿠바 헌법에 따라 미국은 자기 이익이 위협받을 때는 언제나 쿠바에 개입할 수 있었다. 카스트로는 이 같은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에 분노해 결연히 맞서 싸운 중간계급 학생 민족주의자 중 하나였다.

1956년 11월 카스트로는 쿠바 출신 망명자들과 아르헨티나인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이 탄 배를 이끌고 멕시코에서 쿠바로 진격했다. 쿠바의 산악 지대에서 기나긴 게릴라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의 투쟁은 영웅적이었지만,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주창한 공산주의 혁명은 결코 아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의 핵심 원칙이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바 혁명에서, 카스트로와 그의 동맹 세력들은 노동계급의 구실을 게릴라 투쟁 지원으로 제한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들 때문에 끔찍한 참상이



피델 카스트로, 1965년(위). 1963년 모스크바를 방문해 흐루쇼프와 손 잡은 카스트로(아래).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쿠바는 미국을 꺾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 그것도 미국 해안에서 고작 8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카스트로는 1961년 12월 사회주의를 선포했다. 집권 3년 만이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두 측면이 있었다.

한편으로 카스트로는 반제국주의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카스트로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빈민들에게 영감을 줬고, 체 게바라가 “혁명을 확산”시키게끔 고무했다.

그러나 냉전으로 전 세계가 양분돼 있었기 때문에,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쿠바’ 선포는 한 강대국[미국]에 맞서 다른 강대국[소련]과 손을 잡는다는 것을 뜻했다. 쿠바는 소련과 손잡은 덕에

CIA가 획책한 쿠데타를 분쇄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미소 핵무기 경쟁이라는 장기판의 졸 신세가 됐다.

쿠바에서는 (노동자 권력이 아니라) 국유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배계급이 생겨났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은 전혀 도전받지 않았다. 착취는 계속됐고, 착취에서 비롯한 억압도 계속됐다. 문맹률은 크게 낮아졌지만,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고 임금도 낮았다. 특히, 흑인들은 여전히 제도적 인종차별에 시달렸고, 소련 붕괴 후 경제 위기가 닥친 1990년대의 “특별한 시기”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쿠바 국가가 의료를 발달시킨 것은 분명 칭송할 만하다. 그러나 그 수혜자는 쿠바 빈민이 아니었다. 쿠바는 발달한 의료 시스템을 주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예컨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받는 대가로 쿠바 의사를 파견하는 식이었다.

1979년까지도 쿠바에서 낙태는 범죄 행위였다. 가정 폭력은 암묵적으로 용인됐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취업] 기회가 마땅치 않아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데, 성매매는 쿠바 관광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카스트로는 성소수자를 대거 체포하고, “비정상인들”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고, ‘여성스럽다’고 판단된 소년들에게 특수 교육을 강요하는 등 성소수자를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 절

정은 1980년 이후 동성애자들을 1만 명이나 추방한 것이었다.

오늘날 쿠바는 냉전 시기의 국가자본주의에서 시장 지향 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스트로의 죽음을 두고서 [전 세계의] 지배계급은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그들은 카스트로가 자신들의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냈는데도 그를 짓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증오한다.

카스트로는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전 세계의 저항 세력과 반제국주의자들을 고무했다. 미국의 보복 시도에 맞선 카스트로의 저항은 지지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카스트로가 공산주의 사상을 악용해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한 것은 무죄가 될 수 없다.

카스트로가 대변자를 자처한 ‘사회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카스트로가 했던 것 같은] 위로부터의 국가 통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32호 / 번역 김준호

※ 이 글의 전문, 카스트로와 쿠바에 역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기사(‘쿠바가 사회주의라는 신화와 현실’을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경고!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파시스트 당선 유력

다비트 알브리히 오스트리아 혁명적 사회주의자

12월 4일 치러지는 오스트리아 대선 결선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자유당(FPO)의 후보 노베르트 호퍼가 승리할지 모른다.

사민당(SPO) 소속의 현 총리는 이미 호퍼가 승리했다고 여기는 듯하다. 선거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그는 파시스트 지도자인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와 우호 관계를 선언하고, 사민당과 자유당이 그동안의 결끄러운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는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내가 속한 단체 ‘좌선회’는 파시스트에 대항한 공세적 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이런 저항은 인종차별이나 극우를 대신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을 담아낼 좌파적 대안을 건설하는 데서 중요하다.

좌파적 대안

호퍼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면 오스트리아가 파시스트 체제가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심지어 다음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해서 정권을 잡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른 파시스트 정당

인] 프랑스 국민전선(FN)이나 독일 을위한대안(AfD)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 1월과 다르다. 오늘날에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지배계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유지를 이익이라고 여긴다. 더욱이, 1920~30년대와 달리 아직은 파시스트 돌격대가 거리를 주름잡고 다니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자유당과 호퍼가 당장에 파시스트 체제를 구축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부를 운영하며 인종차별적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기구에 침투하고, 경찰 내 영향력을 키우고, 증오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와 거리에서 활개칠 독자적 파시스트 정치 운동을 건설해서 노동계급, 무슬림, 난민, 이주민을 향한 테러를 도모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당의 부상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는 동시에 저항과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건설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그 과제가 시급했던 적은 없다.

출처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1251호 / 번역 김중환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 가능성

유럽연합과 긴축에 대한 반감의 표출

12월 4일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를 놓고 세계 지배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중도좌파 민주당의 현 총리 마테오 렌치는 개헌안이 부결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 차기 집권이 유력한 오성운동은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개헌 반대는 찬성보다 5~11퍼센트가량 더 높았다. EU 내 경제 규모 2위인 영국이 이미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4위인 이탈리아에서도 탈퇴를 주장하는 세력이 집권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경제적 파급력도 클 듯하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개헌이 부결되면 이탈리아 규모 3위의 은행이 파산하고 가장 큰 은행인 유니

크레디토도 곤경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4년 집권한 렌치는 연금과 공공 부문 삭감을 밀어붙이고 노동계약도 시도했다. 이에 맞서 많은 시위와 파업이 벌어졌다. 렌치가 집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노동자 1백만 명 이상이 파업에 나섰다. 올해 10월에도 군소 노총들 주도로 1백만 명 이상이 참가한 파업이 벌어졌다. 11월 27일 로마에서는 수십만 명이 개헌 반대 투표를 주장하며 행진했다.

그러나 광범한 반정부 정서에서 수혜를 입은 것은 주로 우파 세력이다.

정체가 모호한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은 부패 반대를 앞세우지만 동시에 이주민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미디언 출신의 오성운동 지도자 베페 그릴로는 미국 대선에

서 트럼프가 승리하자 크게 기뻐하며 “장차 꼴통과 야만인들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강경 우파 정당인 북부동맹, 부패한 언론 재벌이자 여러 차례 총리를 지낸 우파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전진이 탈리아당’도 열도당토않게 ‘기득권층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반면 급진좌파는 베를루스코니의 집권을 막겠다고 거듭 민주당과 손을 잡으며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기회를 날린 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위기는 광범한 긴축 반대 정서와 만만찮은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급진좌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차근차근 다시금 세력을 키워야 한다.

김중환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 ★ 경기 문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 ★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인 중국의 우주 개발
- ★ 쿠바가 사회주의라는 신화와 현실
- ★ 항의 시위의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필요할까?
- ★ 대우조선 활동가 인터뷰 “경영정상화가 아니라, 구조조정 반대, 총고용 보장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 ★ 공정 방송 정책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KBS 노동자들이 12월 8일 파업에 나선다
- ★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 ★ 철도 노동자와 세종호텔 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
- ★ 세월호 진상 규명 운동 박근혜 정권 끌어내리고 세월호 진실을 건져 올리자
- ★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민주주의’라 해서 다 같은 것일까?

차승일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사상이다. 그만큼 마르크스주의는 대중에게 사회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이에 비춰보면, 북한은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와 관계 없는 권위주의 체제의 사회다.) 물론 이 능력은 평소에는 잠재력으로 남아 있지만, 1871년 파리 코뮌이나 1917년 러시아 혁명 등 노동자와 대중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못해도 박근혜 퇴진 운동처럼 커다란 투쟁이 벌어질 때 종종 발현한다.

야당 정치인들이 집회에 나오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 2008년에는 “박근혜와 나라를 지키겠다”던 김무성이 대통령 탄핵에 가세하려던 상황 등은 모두 대중 운동의 힘이 만들어 낸 것이다. 현재 대중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정치 행위자의 하나이다.

이와 반대로 대중의 능력을 불신하는 관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우 정치’론이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게 돼 있다’는 둥 운동을 모욕하는 우파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대중은 정치적 판단 능력과 실천 능력이 없다는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렇게 대중을 불신하는 박근혜와 우파들도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칭송하는 한국 국가는 탄생부터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대중에게는 사회를 이끌 능력이 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사

해방 직후 일본인 자본가들이 도망가며 남긴 ‘적산’은 당시 남한 총자본금의 91퍼센트나 됐다. 노동자들은 이 적산에 대한 자주관리 운동을 벌였다. 수많은 공장, 언론사, 학교, 광산, 교통 시설이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에 놓였다.

그러나 미군정과 그들이 복권시킨 친일파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 운동을 탄압했다. 미국의 후원으로 권력을 잡은 이승만은 노동자들로부터 강탈한 적산을 자기 정권과 결탁한 자들에게 사실상 공짜로 나눠 줬다. 현재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은 바로 이렇게 탄생했다.

우파들이 찬양하는 1948년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했다. 단독 정부 수립은 분단의 고착화를 뜻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승만은 단독 정부 수립 반대 항쟁을 벌인 제주도민 2만~3만 명을 학살했다. 제주도 항쟁 진압을 거부하며 여수와 순천 군인들이 벌인 반란도 학살로 진압했다.

‘헌법 정신’?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이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을 헌법 전문에 삽입했다. 이것이 우파와 뉴라이트가 칭송하는 ‘헌법 정신’의 기원이다. 박정희 정권은 노동운동과 좌파



1987년 노동자 투쟁 권위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에는 노동자 투쟁이 결정적이었다.

는 말할 것도 없고 온건한 자유주의자들까지도 탄압했다.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에 공수부대까지 투입해 학살을 벌였다. 1981년에는 온건한 자유주의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노태우 정권은 1987년 항쟁의 성과를 되돌리려고 1989년 봄부터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에는 군대까지 투입했다.

이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투쟁들 덕분에 한국은 현재 수준의 민주주의

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결정적으로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사례만 보더라도 자본주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확대는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서구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제도라고 일컬어지는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결정적 시기는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였다. 보통선거권은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을 휩쓴 혁명 물결의 부산물로 노동계급이 획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실체와 한계

윌슨의 사상인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잠재적 반체제 세력인 노동계급의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같은 일상 조직, 정당 같은 노동자 정당, 노동자연대 같은 노동운동 내 좌파 조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실제 내용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군부 쿠데타나 파시즘에 반대해 투쟁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는 그 실제 내용물인 노동계급 조직과 활동의 파괴를 뜻하기 때문이다.

한편, 마르크스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하게 발전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도 본다. 첫째, 부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은 한계다. 예를 들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쓴 선거 비용은 공식으로만 4백79억 원이었다. 비밀리에 불법으로 쓴 돈도 상당할 것이다. 주류 정치인들이 기업주들에게서 받는 정치자금에 기대는 이유다. 그래서 이견회나 노동자나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지만, 그 표의 실질적 무게는 매우 다르다.

둘째, 이 때문에 정치적 대표자들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 면에서도 불평등이 있다. 기업주와 부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고 접촉하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 과정에서 뇌물도 오간다. 최순실 같은 자는 어떤 관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

치고 사익도 챙겼다. 이와 반대로 보통 유권자들은 몇 년에 한 번 선거철에나 정치적 대표자들을 볼 수 있다. 또, 선출해 놓은 정치적 대표자들을 통제할 길이 거의 없다.

셋째,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 입법기관을 제외하면 선출되지 않는다. 그 외 국가의 핵심을 이루는 고위 관료와 치안·사법·군사 기구들은 대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만 대중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이와중에도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협정을 서두르는 국방부를 보라.

넷째, 계급 불평등이라는 근본적 불평등이 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직장에는 민주주의가 전혀 없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인생을 대부분 독재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극소수 자본가와 국가관료의 수중에 있는 경제 권력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려고 하면 자본가들은 자본 유출 등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부를 굴복시킨다. 최근 사례가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민주주의인데, 그 성격과 한계를 밝히고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쓴다. 그 본질을 고려하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자본가 독재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바란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 한계를 뛰어넘어 확장된 역사가 있다. 노동자 권력이었던 1871년 파리 코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가 그것이다.

파리와 러시아의 대중은 노동자 평의회라는 아래로부터 건설한 대안 권력 기구를 통해 잠깐 동안 사회를 직접 통제했다. 노동자 평의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락되는 그 어떤 민주주의보다 앞서가는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풀뿌리 대중의 참여, 주거 지역과 직장에서 이뤄지는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상급 단위 대의원들이 유권자에 의해 언제든 소환될 수 있고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는 것 등이 노동자 평의회 특징이었다. 이것이 파리와 러시아에 나타났던 노동자 민주주의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모습이었다.

사실 노동자 평의회가 만들어지는 계기 가운데 하나는 공공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대중 파업의 시기에 노동자들이 지방정부의 기능을 대신 떠맡아야 할 필요성이다. 노

동자 평의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 평의회는 그 나라 국가를 통째로 대체할 조직적 역량과 경제 권력을 쥐고 있을 것이다. 천대반고 착취당하는 다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서이다.

그 과정에서 대중이 보인 자의식은 대단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때, 문맹률이 60퍼센트나 되는 나라에서 대중의 독서 열의가 솟구쳐 신문 등 인쇄물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골목 모퉁이마다 모여 돌아가며 정치 연설을 했다. 노동자들은 기업주가 도망가거나 폐쇄한 생산 시설을 접수해 생산을 조직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틀을 뛰어넘어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정치·경제 권력을 장악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혁명을 파괴하려는 외국의 침공과 혁명 확산의 실패로 경제가 붕괴하고 노동계급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는 질식당했다.

철도 파업

두 달 넘게 투혼을 발휘하는 철도 노동자들

철도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발휘하며 두 달을 넘겨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정부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래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기업 복지 삭감,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른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은 이미 관철됐다.

그러나 정부의 오판이었다. 노동자들은 올해 4월 박근혜의 총선 참패를 보면서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했고, 정부의 정치 위기가 깊어지던 9월 하순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굳건하게 파업을 지속했다.

철도 파업은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도 고무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화물 정책을 저지하고자 파업에 나서 물류 수송에 타격을 줬다.

철도 파업이 한 달을 경과하던 때 박근혜 퇴진 운동이 솟아올랐다. 10월 29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이 시작된 그날부터 철도 노동자들은 퇴진 운동의 핵심 부대 자리를 지켜왔다. 덕분에 과거 어떤 파업보다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 사장 홍순만은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했지만, 철도 노동자들은 이 비난을 자랑스러워 한다. "주말 백만, 이백만 촛불의 불씨를 간직한 것은 묵묵히 평일 촛불에 참여한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라며 "역대 어느 파업 투쟁보다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성장하는 데도 기여한 철도 파업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행진하는 철도 노동자들.

이기적?

철도 파업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기적인 투쟁만 해 노동운동을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또다시 입증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고자 나선 투쟁이 박근혜 퇴진 운동이 솟아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들은 투쟁 속에서 정치 의식도 발전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기 고유의 요구를 앞세우면 지지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틀렸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현재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성과연봉제 등 노

동개약 반대는 큰 지지를 받는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도록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 확산은 철도 파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장 노동자들

무엇보다 이번 파업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보여 준 투지는 매우 놀랍다.

노동자들은 야 3당이 요구한 파업 종료 종용에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차량, 성북승무, 서울기관차, 청량리차

량 지부 등의 노동자 1백50여 명이 노조 사무실 앞에서 집회와 연좌를 하며 파업 지속을 촉구했고 대다수의 지부장도 이에 동조했다.

이 위기를 넘긴 후에도 지도부는 또다시 파업을 종료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사측과 정부의 강경 태도 때문에 또 실패했다. 노동자들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찾아온 파업 철회 위기에 맞서 파업 지속을 촉구했다. 두 번의 위기를 견뎌 내면서 노동자들은 파업 대의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후 파업 지속도 현장 노동자들의

투지를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활동들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필공 파업을 고수해 파업의 효과가 상당히 줄어드는 불리함이 있지만, 효과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사측은 지난 두 달 동안 무리하게 끌어온 KTX 운행률 1백 퍼센트를 12월 2일부터 9퍼센트가량 낮추기로 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여전히 40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을 저하로 건설 현장 시멘트 수송이 타격을 입어 공사를 중단한 곳도 있다.

대체인력을 저지하거나 필공 근무자들도 파업에 동참시키는 등 파업 효과를 높이는 시도가 결합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이지만, 두 달 넘는 파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 폐기가 만만찮은 일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탄핵을 피하려는 꿈수지만) 박근혜가 물러나겠다는 말을 스스로 하게 만들 정도로 퇴진 운동이 성장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 있다.

철도 활동가들은 이런 정세를 이용해 김영훈 위원장의 파업 종료 시도에 반대하며 투쟁을 지속해 나갈 구심이 돼야 한다.

이정원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노동계급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려는 시도

박근혜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 정원을 줄이는 한편, 대학을 더욱 기업의 수요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22년을 3주기로 나눠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바 있다.

최근 2주기 구조조정 계획 초안이 발표됐다. 한마디로 1주기 때 드러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안이다.

첫째, 대학 정원을 줄이는 "양적 구조조정"을 하위권 대학에 집중시키겠다고 한다. 1주기 대학 평가 때는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서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들에서 모두 정원을 감축했다. 그런데 2주기 계획에서는 대학을 두 부류로 나눠서 상위 50퍼센트에는 정원 감축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하위 50퍼센트에게는 더욱 강하게 정원 감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1주기 때도 서울지역 대학(1.9퍼센트)보다 지방대학 정원 감축률(9.6퍼센트)이 5배 이상이었는데, 새 계획에 따르면 하위 대학들은 기존보다 정원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11월 20일 학생총회에 모인 고려대 학생들.

감축률을 1.5~2배로 높여야 한다.

부의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하위권 대학 정원 감축은 노동계급과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대학에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줘, "눈높이"를 낮추게 하는 효과를 낸다.

기업주들은 3D업종의 일손은 부족한데 대졸자들이 이를 기피하는 게 문제라며 대학 진학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모든 노동자가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에 77.8퍼센트에 육박하던 대학 진학률은 2016년 69.8퍼센트로 줄었다.

둘째,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라는 압박도 계속할 계획이다.

1주기 때 정부가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인문학, 기초 과학, 예술 등의 학문이 축소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학문들만 확대됐다. 이런 방향은 계속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대학을 글로벌 경쟁대학, 고등 직업교육 중심대학, 중견·강소대학, 한계대학으로 나누겠다고 한다. 그리고 한계대학은 퇴출시키고, 나머지 대학들은 기업들의 연구를 지원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을 기업 수요에 맞춰 구조조정할수록 대학 교육 과정은 실용학과 중심으로 협소화돼 종합적인 사고 발달 훈련이 더한층 방해받을 것이고, 자유로운 학문 탐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라 바뀌는 기업 수요의 변화에 따라 학과가 생기거나 사라지면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과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 대학에 성과 논리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교수·직원들의 처지는 악화하기 십상이다.

정부는 마치 청년실업의 원인이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지만 청년 실업은 해결되지 않았다. 진정한 문제는 경제 위기에 노동자들을 공격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여 온 기업주들, 이들을 비호해 온 정부에 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이런 진정한 문제를 가리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낸다.

기업주와 지배자들은 모든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할 테지만 교육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지 말아야 할 까닭은 없다.

대학이 이윤 논리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와 투쟁은 끊임없이 벌어져 왔다. 지금도 탐욕으로 점철된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서,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인 고려대 미래대학 설립을 반대해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투쟁을 확대·강화해 박근혜의 친기업 대학 구조조정을 중단시켜야 한다.

정선영